

미국의 대일압력과 요시다 노선의 대미협조외교에 대한 재고찰

김 남 은*

(e-mail : manbo5533@hanmail.net)

< 목 차 >

1. 서론
2. 점령기 일본의 대미추종의 정치 현실
3. 조기 강화조약과 대미협조외교
4. 오키나와 반환과 대미협조외교
5. 결론

키워드: 日本の外交(Japanese diplomacy), 対米協調外交(Japan's Cooperative Diplomacy with the US), 吉田路線(Yoshida Line),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San Francisco Peace Treaty), 沖縄返還(The recovery of Okinawa)

1. 서론

일본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미국의 압력이며, 이때 문제의 본질은 일본의 선택이 ‘협조적 입장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자주적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는 대일압력에 대한 대응방식에 있다.¹⁾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1945년 9월 2일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28일까지 일본의 모든 의사결정은 미국에 있었고 일본은 외교권을 포함한 주권을 모두 상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록 지배와 피지배의 수직적 관계이기는 했지만, 미군정 점령 초기 일본 정부는 GHQ(연합군 총사령부)와 긴밀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점령 말기에는 조기강화를 위한 미국과의 교섭에서 예정된 독립국을 대표하는 정부로서 인정받고 있었다. 전후 일본 외교는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 속에서 대외교섭이 거듭되는 역설적 상황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일본 외교의 구조적 한계가 주권회복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 고려대학교 BK21Plus 중일언어문화교육연구 사업단 연구교수, 현대일본정치외교사 전공
1) 마고사키 우케루(2013)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양기호 역), 메디치미디어, p.32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졌다는 점이다. 미국의 간접통치 하에서 일본은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발효된 이후에는 냉전 체제의 국제사회에서 미일동맹체제에 철저히 편승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협조’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였으며²⁾ 그 정신은 요시다 노선으로 이어져 왔다.³⁾ 즉 요시다 노선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에 순응하고 미국의 전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가운데 숙성되어진 일본의 국가전략이자 방위정책이며 외교정책이다. 요시다 시게루(吉田茂)가 점령기 동안 줄곧 수상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대가였다.

한편 전후 일본 외교론의 대부분이 요시다 노선을 축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고사카 마사타카(高坂正堯)가 1964년 2월 『중앙공론』(中央公論)에 “재상 요시다 시게루론”(宰相吉田茂論)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⁴⁾ 이 글은 1963년 1월 고사카가 같은 잡지에 “현실주의자의 평화론”(現實主義者の平和論)을 게재해 주목받은 이후의 성과물이다.⁵⁾ 고사카는 요시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요시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요시다의 맥아더와 대등한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중략) 요시다의 무엇보다도 일본의 부흥을 고민하고 있었고 전후 개혁이 이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철저히 저항했다.⁶⁾

여기에서 고사카는 요시다가 “무엇보다도 일본의 부흥을 고민하고 있었고, 전후 개혁이 이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철저히 저항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요시다 예찬론은 1984년 5월 나가이 요노스케(永井陽之助)가 『문예춘추』(文藝春秋)에 게재한 “요시다 독트린은 영원하다”로 이어졌다.⁷⁾ 이 시기 ‘요시다 독트린’이라는 용어와 함께 일본을 성공으로 이끈 ‘재상 요시다’상이 정착되었다. 이후 요시다에 대한 이와 같은

2) 이원덕(2005) 「일본의 동아시아지역 형성정책의 전개와 특징」 『일본연구논총』 22, p.66

3) 요시다 노선이란 일반적으로 요시다를 필두로 자유당계의 흐름을 이어받은 관료 출신 정치가를 중심으로 한 세력으로 ‘보수분류’라고도 불린다. 요시다 노선은 정치가와 인맥으로 연결된 관료, 이들의 비호 아래서 재건에 성공한 대기업 경영자들의 총칭으로 정계, 관료, 재계의 주류가 참가한 삼위일체가 보수정권을 이어 온 권력기구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중 요시다 노선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는 이른바 ‘요시다 학교’에서 충원된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와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등과 같은 고급 관료 출신의 정치가들이다.

4) 高坂正堯(1964) 「宰相吉田茂論」 『中央公論』 79(2) 참조

5) 高坂正堯(1963) 「現實主義者の平和論」 『中央公論』 78(1) 참조

6) 高坂正堯(2006) 『宰相吉田茂』 中央公論新社, p.33

7) 永井陽之助(1984) 「吉田ドクトリンは永遠なり」 『文藝春秋』 pp.382-405

연구는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왔으며,⁸⁾ 2009년 2010년 요시다에 대한 두 권의 평전을 출판한 기타 야스토시(北康利)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신념의 정치인 요시다”를 혼미한 일본정치 현실에 대비해 부각시키려 시도했다.⁹⁾

특히 2011년 3월에 일어난 동일본대진재 이래로는 대중평론 수준에서 강력한 리더십 대망론에 편승해 요시다의 리더십이 주목받기 시작했다.¹⁰⁾ 우익적 논조의 잡지 『Will』 2010년 6월호의 특집 제목은 “지금이야말로 요시다 시게루 대망론”(今こそ「吉田茂」待望論)이었다. 특집 대담에서 와타나베 쇼이치(渡部昇一)는 전진의 만주에 대한 적극정책과 만년에 보인 적극적인 재군비 옹호론을 들어 요시다를 재평가했다. 그의 대담 상대는 『혁명 반골, 요시다 시게루(赫奕たる反骨 吉田茂)』의 저자 구도 미요코(工藤美代子)였다. 그녀는 요시다가 메이지 2세대로 태어나 메이지유신 세대의 기백과 교양을 물려받은 사람이며, 인기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 반골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¹¹⁾

반면 요시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전직 외교관 마고사키 우케루(孫崎享)에 의하면 요시다는 일반 시민에게 각인된 수상의 거만한 모습과는 판이하며, 점령

-
- 8) 먼저 요시다의 리더십에 대한 예찬론 또는 찬미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연구로서 高坂正堯(1968) 『宰相吉田茂』 中央公論新; 工藤美代子(2010) 『赫奕たる反骨, 吉田茂』 日本經濟新聞出版社; 北康利(2009) 『吉田茂: ポピュリズムに背を向けて』 講談社; 北康利(2010) 『吉田茂の見た夢: 獨立心なくして國家なし』 扶桑社 등의 연구서와 渡部昇一·工藤美代子(2010) 「今こそ「吉田茂」待望論」 『Will』 6, pp.62-73; 北康利「吉田にみる復興への志」(2011) 『歴史通』 7, pp.66-77 등의 연구논문이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片岡鐵哉(1992) 『さらば吉田茂: 虚構なき戦後政治史』 文藝春秋; 孫崎享(2012) 『戦後史の正体 1945-2012』 創元社,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요시다 독트린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 있는 연구로서는 永井陽之助(1984) 「吉田ドクトリンは永遠なり」 『文藝春秋』 5; 片岡鐵哉(1992) 「さらば吉田茂: 虚構なき戦後政治史」 『文藝春秋』; 三浦陽一(1996) 『吉田茂とサンフランシスコ講話』 (上·下) 大月書店; 中西寛(2003) 「「吉田ドクトリン」の形成と変容: 政治における「認識と当爲」との關連において」 『法學論叢』 152(5·6), pp.276-314 등이 있다. 요시다의 전기류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猪木正道(1995) 『評伝吉田茂』 全4卷, ちくま學芸文庫; 井上壽一(2009) 『吉田茂と昭和史』 講談社; 工藤美代子(2010) 『赫奕たる反骨, 吉田茂』 日本經濟新聞出版社 등이 있으며, 村井哲也(2008) 『戦後政治体制の起源: 吉田茂の「官邸主導」』 藤原書店과 楠綾子(2009) 『吉田茂と安全保障政策の形成: 日米の構想とその相互作用, 1943-1952』 ミネルヴァ書房와 같이 국내정치에 초점을 두거나 안보정책에 초점을 둔 연구도 존재한다. 이 밖에도 ジョン·ダワ(1981) 『吉田茂とその時代』 (上·下) (大窪愿二譯) TBSブリタニ; 리처드 B. 핀(Richard B. Finn)(1993) 『マッカーサーと吉田茂』 (上·下) 同文書院インターナショナル와 같이 미국의 시각에서 다룬 요시다의 연구가 있다.
- 9) 北康利(2012) 『吉田茂: ポピュリズムに背を向けて』 上·下, 講談社; 北康利(2010) 『吉田茂の見た夢: 獨立心なくして國家なし』 扶桑社 참조
- 10) 남기정(2013) 「요시다 시게루의 전후 구상과 리더십: “군대없는 메이지국가”구상과 “기치국가”의 현실」 『일본 부활의 리더십: 전후 일본의 위기와 재건축』 동아시아연구원, pp.29-32
- 11) 渡部昇一·工藤美代子(2010) 「今こそ「吉田茂」待望論」 『Will』 6, pp.62-73

군과 대등한 줄다리기를 하는 요시다의 모습은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¹²⁾ 즉 요시다야 말로 본질적 중미 그 자체이며,¹³⁾ “고사카를 비롯한 요시다를 찬미하는 이들은 요시다가 구축한 종속적인 미일관계의 강력한 옹호자일 뿐”이라는 것이 마고사키의 평가이다.¹⁴⁾ 또한 가타오카 데츠야(片岡鐵哉)는 1992년 『요시다 시게루여 안녕히: 허구 없는 전후 정치사(さらば吉田茂: 虚構なき戦後政治史)』에서 “일본을 국가 없는 민족으로 만든 원흉”으로서 요시다를 지목한 바 있다.¹⁵⁾

이처럼 요시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며,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전후 일본의 형성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¹⁶⁾ 전후 일본을 논할 때 요시다에 대한 평가가 제외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요시다 노선은 전후 모든 내각의 기본적인 국가정책으로서 채택되어 일본 정치에 강력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요시다에 대한 예찬론이나 비판론과 같은 이항 대립적인 평가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요시다를 비롯해 요시다의 뒤를 이은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와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등과 같은 관료 출신의 정치가들의 외교 노선은, 대미의존성을 용인하고 현상유지를 주장하면서 대미협조관계를 주장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고사카나 와타나베가 주장하는 것처럼 요시다가 맥아더와 대등한 입장에서 전후 개혁이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철저히 항의했거나 재군비 옹호론자였다면, 요시다는 미국의 압력에 대해 ‘협조’가 아닌 ‘자주’ 노선을 선택한 인물로 평가되어야만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요시다 노선의 대미협조외교를 재고찰함으로써 일본의 대미외교에 있어서의 구조적 문제점을 밝히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패전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국제정치변화와 일본 국내정치체제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의 대일압력에 대해 일본 외교가 어떠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점령기 일본의 대미추종의 정치 현실

점령 개시기 일본에게 가장 중요한 외교과제는 포츠담선언 수용과 항복의 의미를 일

12) 마고사키 우케루(2013), p.63

13) 위의 책, pp.43-45

14) 위의 책, p.70

15) 片岡鐵哉(1992) 『さらば吉田茂: 虚構なき戦後政治史』 文藝春秋, p.33

16) 渡辺昭夫(1999) 『戦後日本の形成者としての吉田茂』 北岡伸一, 五百旗頭眞(編) 『占領と講和: 戦後日本の出発』 情報文化研究所, pp.166-178

본의 국가적 생존과 연결시켜 명확하게 하는 일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점령군의 일본 장악 이후 일본 정부에게 얼마만큼의 국내통치권이 남아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점령군은 일본 정부를 통한 간접통치를 행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 특히 국내 통치권을 둘러싼 점령군과 일본 정부의 경계선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¹⁷⁾ 일본으로서는 천황제를 유지시키고 일본 정부에 의한 간접통치의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모든 재외 외교기간의 재산과 공문서를 압수한다는 통첩을 각국에게 보냈으며, 11월 4일에는 도쿄에 있는 중립국이나 연합국 대표와의 직접적인 접촉 또한 금지시켰다. GHQ와의 교섭이 일본의 외교의 전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천황제 유지와 일본 정부 해체를 피하기 위해 GHQ 측에게 스스로의 이용 가치를 인정받는 일에 몰두했다. 일본 정부로서는 점령군에게 믿음을 주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특히 GHQ의 전쟁범죄자 처리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만 했다. 1945년 9월 2일 항복문서에 서명한 직후인 9월 13일에는 이미 전쟁범죄자 범위에 대한 내용이 일본 정부에게 통보되었다. 범죄자 종류는 직접 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한 자, 그것을 묵인한 책임자, 전쟁에 대한 정치상의 책임자로 분류되었다.¹⁸⁾ 그러나 이들 모두가 전쟁범죄자로 포함된다면 구세력 모두가 전쟁범죄자로 처벌받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이에 일본 정계, 재계 등 구세력의 불안과 동요는 극에 달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전쟁범죄자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 자기변명과 책임회피에 바빴다. 천황뿐만 아니라 당시 수상이었던 히가시구니노미야 나루히코(東久邇宮稔彦王)와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국무대신도 전쟁책임은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군벌에 있다는 것을 신문기자들에게 밝히면서 대외적인 자기변명을 아끼지 않았고, 서로 앞을 다투어 맥아더와 접촉하기 시작했다. 특히 고노에는 맥아더와의 회견에서 도조 군벌의 책임을 강조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귀족세력과 재벌은 이 독단적인 군부의 개전행위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다.¹⁹⁾

항복문서에 서명한 외무대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는 이와 같은 패전 직후 일본의 정치현실을 다음과 같이 일기에 쓰고 있다.

전쟁범죄자 체포가 시작되고 나서 정계와 재계 등 구세력의 불안과 동요는 극에 달했다. 특히 내각에 있던 히가시구니노미야 수상이나 고노에 대신 등은 모든 방법을 동

17) 이오키베 마코토(2002) 『일본 외교 어제와 오늘』 (조양욱 역), 다락원, pp.45-46

18) 重光葵(1988) 『(續) 重光葵手記』 中央公論社, p.359

19) 위의 책, pp.266-267

원하여 책임을 피하고자 안절부절 못했다. 최고 간부들이 부지런히 맥아더 주변을 떠돌면서 자기 안전만 피하려고 한다. (중략) 누구 할 것 없이 체면과 자존심을 내던지고 점령군에 달라붙는 모습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다.²⁰⁾

여기에서 시게미쓰는 점령군에게 아부를 서슴지 않는 일본 정부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요시다가 일본 내각 인사에 깊이 관여하여 미국과 도모했던 사실을 들어 일본 정부는 꼭두각시 정권이라고 한탄했다.

1945년 10월 9일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새 내각이 성립되었다. 요시다 외상이 획책한 것이다. 요시다는 하나하나 맥아더 총사령부로부터 의향을 청취해서 인선을 결정했다. 유감스럽게도 일본 정부는 꼭두각시 정권이 되어 버렸다.²¹⁾

GHQ 최고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도 당시 일본의 대미추종의 현실이 잘 드러난다. 1946년 10월 『지지신보』에 “권력자 숭배”라는 제목의 한 논설이 실렸다. 내용은 맥아더 전기가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이래, 맥아더를 맹종하는 투고가 신문이나 잡지에 쇄도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즉 2천 년에 걸쳐 뱃속까지 스며든 통치자에 대한 숭배를 조심해야한다는 경고의 메시지였다. 논설에 따르면 이런 식의 투고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황 전용이었는데 이제는 맥아더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살아있는 신”, “저 하늘의 태양”, 심지어 일본 최초의 천황인 “진무천황(神武天皇)의 재림”과 같은 용어들이 맥아더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닛폰 타임스』에 실린 한 논설도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정부는 걸출한 신이나 위인 혹은 지도자가 국민에게 선물한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고치지 않는 한 민주정치는 조만간 파멸을 맞이할 것이다. 맥아더 원수가 일본을 떠나면 사람들은 바로 그 다음날부터 다른 누군가 신이 될 만한 존재를 찾아 나설 것이다. 그 밑에서 다시금 태평양전쟁을 치른 독재정치가 재현되거나 않을까 우리는 심히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중략) 맥아더 원수가 전후 일본을 통치하면서 보인 지혜와 이 나라를 민주화하는 데 기울인 노력에 보답하는 길은 그를 신으로 떠받드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그런 비굴한 마음을 버리고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보답이 될 것이다.²²⁾

20) 重光葵(1988), pp.252-253

21) 위의 책, p.270

이와 같은 맥락으로 시게미쓰도 다음과 같이 비난하고 나섰다.

지조도 없고 자주성도 없는 일본 민족은 과거에도 중국문명이나 유럽문명의 세례를 받으면서 표류해 왔다. 그리고 오늘날 적국의 지배에 만족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추종하여 환영하고, 더 나아가 맥아더를 마치 신처럼 떠받들고 있다. 이런 태도는 황실이나 서민들이나 다 마찬가지다.²²⁾

이처럼 일본은 스스로 승전국 맥아더에게 신성불가침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맥아더의 회고에서도 잘 드러난다.

나는 일본 국민에 대하여 사실상 무제한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역사상 어떤 식민지 총독이나 정복자도 내가 일본 국민에게 행사했던 권력을 휘둘렀던 사례가 없을 정도이다. 군사점령이라는 것은 결국 한쪽은 노예가 되고 다른 한쪽은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²⁴⁾

당시 맥아더는 미국의 대일점령이 일본 국민을 노예로 삼는 것과 같은 것이며 미국은 곧 일본 국민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점령기 동안 맥아더를 비롯한 휘하 사령부의 권한은 무조건적인 행복을 기초로 한 절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협조하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나타난 것이 어찌면 당연한 일이지도 모른다. 특히 GHQ의 전범처리를 두려워 한 구세력에게 대미협조 이외의 선택지는 없었다.

이처럼 패전 직후부터 일본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미국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따라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뒤에도 여전히 이어졌다. 강화조약 발효 이후에도 일본외교가 얼마나 대미 추종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1957년 외무성 차관이었던 오노 가쓰미(大野勝巳)가 잘 설명하고 있다.

일본 정치가나 관료들은 외교를 점령군을 상대로 하는 섭외사무 정도로 인식했다. (중략) 미일안보체제를 금과 옥조로 여기고, 모든 것에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을 결정하는 미국추종적 태도가 일본 내에 완전히 정착되었다. 그 결과 외교 감각이라고

22) 존 다우어(2009) 『패배를 껴안고』 (최은석 역), 민음사, p.524

23) 重光葵(1988), p.253

24) 더글라스 맥아더(1993) 『맥아더 회고록』 (반광식 역), 一信書籍出版社, pp.33

는 자취를 감추었다. 즉 점령 당국에 복종하면서 어떻게 관계를 잘 맺을까를 생각하고, 점령군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외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외교적 경륜이라고는 손톱만 큼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독립국의 지위를 회복한 뒤 일본은 외교 감각을 회복하려고 해도 오랜 타성으로 인해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여전히 점령군의 중추세력인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자주독립의 정신은 한번 상실하면 두 번 다시 회복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²⁵⁾

오노에 의하면 일본은 자주적인 판단은 물론 점령군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외교라고 생각할 정도로 외교적 감각을 잃어버렸으며, 점령 이후에도 일본 스스로가 모든 것을 점령군에게 의탁할 만큼 일본 내 미국추종적 태도는 정착되어 버렸다. 또한 오노가 “자주독립의 정신은 한번 상실하면 두 번 다시 회복할 수 없음”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전후 일본 외교는 미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3. 조기 강화조약과 대미협조외교

전후 역사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했던 정치인은 요시다 시게루로 알려져 있다. 요시다에 의하면 일본 외교의 근본은 대미협조이며, 이는 “메이지 이후의 외교의 태도를 지키는 것”, 즉 대미협조라는 일본의 외교적 선택은 “미군에 점령을 받는 일시적인 상태에 대한 타성이 아니라 메이지 이후 줄곧 이어져 온 일본 외교의 근본”이다.²⁶⁾ 점령기 요시다는 전후 초대 내각인 히가시구니 내각의 외상으로 입각하여 점령군과 일본 정부 간을 잇는 가교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히가시구니 내각의 뒤를 이은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내각에서도 외상으로 “전쟁에는 졌지만 외교에서 승리해 보인다.”²⁷⁾는 각오로 연합군 총사령부와의 교섭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처럼 요시다는 시데하라 내각부터 맥아더와의 교섭창구를 독점하고 있었으며 이때부터 실로 10년간 요시다 시대가 열렸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한편 패전 직후 일본 정치에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미군정은 전전의 일본을 지탱한 보수적 가치와 제도를 완전히 폐기하고자 했으며, 대신 ‘비군사화’와 ‘민주

25) 大野勝巳(1978) 『霞が關外交: その伝統と人々』 日本經濟新聞社, pp.33

26) 吉田茂(1998) 『回想十年』 1, 中央公論社, pp.22-35

27) 鑄木清一(1972) 『日本政治家100選』 秋田書店, p.170

화’ 내지는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1946년 5월 수상의 자리에 오른 요시다는 이러한 미군정의 점령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재군비는 제국헌법에 의해 명백하게 포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군비의 논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²⁸⁾ 이와 같은 인식은 다음과 같은 글에도 잘 나타나 있다.

도대체 나는 재군비 등을 생각하는 자체가 가장 어리석은 것이며 세계정세를 모르는 바보의 잠꼬대라고 말해주고 싶다. 타국이 미국과 필적할 만한 군비를 갖게 되면 그 자체로서 미국에게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패전한 일본이 아무리 애쓰더라도 미국과 같은 군비란 도저히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 내가 재군비를 반대하는 이유 중의 첫째이고, 둘째로는 국민의 실정으로 보아 재군비의 배경이 되는 심리적 기반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는 점이다. 셋째는 이유 없는 전쟁에 끌려갔던 국민으로서의 패전의 상처가 많이 남아 있으며 아직 그 처리가 끝나지 않은 것이 많다. 오늘날 혼자만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국가는 없으며 공동방위가 주된 관념이다.²⁹⁾

또한 한국전쟁 발발 이후 이 전쟁에 일본인 의용군을 파견해야 하는 문제가 하나의 쟁점으로 부각되자,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의용군은 허락하고 싶지 않다.”는 요시다의 입장은 단호했다. 그가 의용군 파견을 반대한 이유는 “강화조약 내지는 조기 강화가 실현되기 어렵다고 하는 사정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며, 만약 강화조약이 실현된다고 해도 일본을 호전국(好戰國)이라고 여겨 조약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등을 삽입하는 것을 강요받을 일”을 우려했기 때문이다.³⁰⁾

그러나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일본에게 재군비 압박을 크게 가하기 시작했으며, 일본 내에서도 국내 치안을 둘러싼 재군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 발발 약 보름 후인 1950년 7월 8일 맥아더는 요시다에게 서간의 형식으로 7만 5천명 규모의 경찰예비대의 창설과 해상보안청의 8천명 증원을 명령했다.³¹⁾ 이에 요시다 내각은 8월 10일 정령(政令)으로서 경찰예비대령을 공포하고 당일로 시행에 들어갔으며, 8월 23일에는 약 7천명의 경찰예비대 대원의 입대가 정식으로 이루어졌다. 10월에는 경찰예비대 조직 강화를 위해 일본제국의 군인이었던 3,297

28) 大嶽秀夫(2005) 『再軍備とナショナリズム』 講談社, pp.81-82

29) 吉田茂(1958) 『回想十年』 2, 新潮社, pp.160-161

30) (1950년 7월 29일) 「吉田茂『國會答弁・衆議院本會議』 大嶽秀夫(1991) 『戦後日本防衛問題資料集: 非軍事化から再軍備へ』 1, 三一書房, pp.443-444에 수록

31) (1950년 7월 8일) 「マッカーサー書簡・警察予備隊設置」 大嶽秀夫(1991), p.427에 수록

명이 추방 해제되어 경찰예비대의 간부로 채용되었다.³²⁾ 지금까지 재군비를 반대해 오던 요시다가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경찰예비대 창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신속하게 일본 경찰예비대를 탄생시킨 것이다.

요시다의 회고에 따르면 “나는 전부터 경찰력의 부족을 우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충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사령관의 지시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였다. 오히려 절호의 기회라고까지 생각했다. 또한 빨리 실현되도록 바로 관계관청의 책임자로 하여금 서한의 요청에 대한 조치에 협조토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³³⁾ 요시다의 이러한 입장변화는 경찰예비대 창설이 미국의 재군비 요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대내적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지만, 사실 요시다는 자신의 최대과제인 조기강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치적 이익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³⁴⁾

1950년 10월 요시다가 미 해군으로부터 한국 내의 소해업무를 요청받아 이를 해상 보안청 하에 편성된 일본의 특별 소해대(掃海隊)가 담당하도록 한 사실에서 이러한 요시다의 의도는 잘 드러난다. 당시 해상 보안청 장관이었던 오오쿠보 다케오(大久保武雄)의 회상에 따르면, 한국 내의 소해업무는 일본 헌법에 저촉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작업은 비밀리에 실행되었다. 하지만 이 작업 중에 한척의 소해정이 침몰하여 한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때 오카자키(岡崎) 관방 장관은 요시다의 말을 대신해 “일본 정부는 유엔군에게 전면적으로 협조하고 그에 따라 강화조약을 일본에게 유리하게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하면서 계속 작업할 것을 명령했다. 즉 요시다는 미국 내 일본 조기강화에 대한 반대의 주장이 미군부의 대일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설득하고 미군부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한국 내의 소해업무가 헌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밀리에 실행하도록 지시한 것이었다.³⁵⁾

1951년 1월 29일 대일강화문제 담당 국무성 고문으로 임명된 덜레스(John F. Dulles)와 요시다와의 강화조약 조기체결을 위한 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교섭이 시작되자 안전보장을 둘러싼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하나는 일본의 재군비 문제였으며 다른 하나는 강화 후의 미군 주둔을 일본이 어떠한 형식으로 인정하는가라는 문

32) 김남은(2017) 「강화와 안보를 둘러싼 미일교섭과 일본의 전략: 요시다 시게루를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56, pp.359-360

33) 吉田茂(1958), pp.142-143

34) 김남은(2017), p.360

35) 김남은(2017), p.360

제였다. 딜레스는 일본이 재군비를 통해 자유세계에 공헌해줄 것을 요구했으며,³⁶⁾ 요시다는 “재군비의 발족에 대해서”(再軍備の發足について)라는 문서를 통해서 딜레스를 만족시킬만한 제안을 했다.

평화조약 및 미일협력협정의 실시와 동시에 일본에 있어서 재군비를 발족할 필요가 있다. (중략) 첫째, 육·해군을 포함한 새로운 5만의 보안대(가칭)를 만든다. 이 5만 명은 예비대와 해상보안대와는 별개의 카테고리로 훈련하고 장비에 있어서도 예비대와 보안대 보다 강력한 것으로 하고 국가치안성의 방위부에 소속시킨다. 이 5만 명은 일본에 재건될 민주적 군대의 출발이 된다. 둘째, 자위기획본부라는 명칭의 기관을 국가치안성의 방위부에 부설한다. 여기에는 영·미 군사사정에 통달한 기술자를 기용하여 이들을 미일협정에 의해 설치되는 공동위원회의 사업에 참여시키는 한편, 이것을 장래의 민주적인 일본 군대의 참모본부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³⁷⁾

여기에서 요시다는 딜레스에게 “육·해군을 포함한 새로운 5만의 보안대”창설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들을 “예비대와 해상보안대와는 별개의 카테고리로 훈련하고, 장비에 있어서도 예비대와 보안대 보다 강력한 것”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딜레스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경찰예비대와 별도로 5만 명의 보안대를 설치하고 이를 정식 군인으로 발족하기로 했으며, 국가안전보장성을 설치하는 것에도 합의했다.³⁸⁾ 결과적으로 요시다는 미국의 재군비 요구에 동의하고 미국의 기지 취득을 전제로 한 강화조약과 안보조약을 체결했으며, 이러한 결과로만 보자면 요시다는의 조약체결은 대미협조외교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요시다가 점령기 일본에서 누구보다 미국에 협조하는 인물이었다고 해서 ‘자주외교에 대한 희구(希求)’마저 결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 재군비를 줄곧 반대해 오던 요시다는의 전략은 첫째, 재군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둘째,

36) 外務省(編)(2002a) 『日本外交文書: 平和條約の締結に關する調書』 III, 外務省, pp.560-561

37) 外務省(編)(2002b) 『日本外交文書: 平和條約の締結に關する調書』 IV, 外務省, pp.53-54

38) 大嶽秀夫(2005), pp.93-95 그러나 처음부터 이러한 합의가 도출된 것은 아니었다. 요시다는 줄곧 재군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도 재군비에 거부하는 입장은 단호했다. 예를 들어 1950년 9월 15일 미국이 ‘재군비와 기지 취득’을 전제로 한 대일강화 구상을 전해왔을 때에도 요시다는 외무성을 통해 ‘A작업’, ‘B작업’, ‘C작업’, ‘D작업’을 완성시켜 미국의 요구에 대비하고자 했다. 그 중에서도 ‘D작업’은 1950년 10월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함에 따라 강화문제가 한층 더 긴급한 문제로 부각되자, 요시다 내각이 1951년 1월 강화조약 교섭을 위한 딜레스 방일에 대비하여 최종안으로 내어놓은 것이다. ‘D작업’에서도 요시다는의 재군비 반대의 입장은 견지되고 있으며, 대신 안전보장을 위한 협력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이와 관련해서는 김남은(2017), pp.363-366 참조).

자신의 최대 정치적 과제인 조기강화를 실현시키는 한편, 셋째, 아시아 여러 나라의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에 있었다. 경제적 부담과 조기 강화 실현의 목적이외에도, 요시다는 일본의 주권이 회복될 때까지 소련을 비롯한 주변국에게 재군비를 한다는 빌미를 제공하고 싶지 않았다. 일본의 재군비는 포츠담선언과 극동위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또 이를 소련이 구실로 삼기에 충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요시다는 미국의 대규모적인 일본 재군비 계획을 추종하다 보면 결국 일본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될지도 모르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중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대행위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³⁹⁾

반면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요시다가 재군비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재군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독립국인 이상 절대적으로 군대조직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평화조약 이후 일본의 재군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일본은 안전을 위해 재군비해야만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⁴⁰⁾ 또한 “국력이 허락된다면 바로 군대를 가지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⁴¹⁾ 즉 일본의 재군비는 요시다 자신의 생각과 반드시 위배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문제는 재군비가 요시다 자신의 생각보다 시기상 빠르다는 것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주외교에 대한 회구’는 요시다가 미국과의 ‘평등한 협력자’가 되는 것을 외교의 기본목표로 삼고 있었던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1950년 10월 13일 외무성이 밝힌 “조약대책초안”에서는 일본이 민주주의 진영의 평등한 일원으로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강조했으며, 1951년 1월 20일 강화문건 “D작업”에서도 “협력자의 자세로 조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또한 1951년 1월 31일 요시다가 미국에 제출한 비망록에서는 “미일 양국은 평등한 자세로 상호의 안전협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컨대 요시다는 ‘대미협조’를 일본 외교의 근본으로 여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으로부터의 ‘자주성’ 내지는 ‘평등한 협력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강화조약과 더불어 안보조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요시다의 선택은 미국에 대한 ‘협조’외교와 ‘자주’외교의 이중적 아이덴티티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이중적 아이덴티티는 요시다 노선을 이어받은 전후 일본의 내각에서도 잘 드러난다.

39) 吉田茂(1958), pp.175-176

40) 外務省(編)(2002a), p.573

41) (1952년 8월 5일) 「吉田茂『保安廳長官としての軍示』」(『毎日新聞』), 大嶽秀夫(1992) 『戦後日本防衛問題資料集: 講和と再軍備の本格化』 2, 三一書房, p.449

4. 오키나와 반환과 대미협조외교

요시다의 우등생이라고 불리며 요시다 노선의 대표적인 추종자로서 수상을 역임한 사람은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와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가 대표적이다. 전후 역대 내각이 미일안보조약을 축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모두 요시다 노선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이케다와 사토 내각은 요시다 노선이라고 하는 이념에 가장 충실한 정책을 실천하고 있었다. 1960년대 일본은 고도경제성장과 정치안정이 지속되던 시기였으며, 이케다는 경제우선주의의 요시다가 택했던 노선의 연장선에서 정책을 주도하고 있었다. 국내정치 면에서는 국민소득배증 계획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내걸었으며, 외교적인 면에서는 당시 미국의 베트남전쟁 수행에 일본이 협력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어 자주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일본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관련이 있다.

1960년 6월 19일 수상 취임 직후 이케다는 미국을 방문하여 6월 22일 ‘케네디·이케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미일 양국이 동반자관계에 기초하여 각료급의 미일경제무역위원회를 설치에 동의한다는 골자를 다룬 것이다. 일본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미국과의 격차해소가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의 대미외교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케다는 일본의 지위를 격상시켜 미국과 대등한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케다는 요시다의 ‘자주외교에 대한 회구’를 잘 계승한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케다의 ‘자주외교에 대한 회구’가 자주외교 노선의 헌법 개정이나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국제사회의 독자세력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다.⁴²⁾

1964년 11월 이케다의 뒤를 이은 사토 내각은 한일국교정상화, 중일관계의 진전, 오키나와 반환 등의 주요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대미관계에서 최대의 과제는 오키나와 반환이었다. 사토는 이케다와 같이 요시다 노선을 계승하여 대미협조외교와 미일안보조약의 틀에서의 경제발전을 중시했으나, 외교적으로는 전후 상실한 오키나와를 회복하는 것을 최고의 현안과제로 삼았다. 1965년 8월 19일 전후의 수상으로서는 처음 오키나와를 방문한 사토는 “오키나와가 본토로 반환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전쟁은 끝났다고 할 수 없다.”라고 언급하여 오키나와 반환과 관련한 대미외교에 자신감을 보였다.

42) 현진덕(2013) 「요시다 노선과 하토야마 노선: 전후 일본외교정책의 2개의 이념형」 『일본문화연구』 45, p.615

그러나 사토는 미일관계에 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반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었다.⁴³⁾ 1967년 11월 14, 15일 양일에 걸쳐 워싱턴에서 열린 사토와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오키나와의 시정권을 일본에 반환한다는 방침 하, 오키나와의 지위에 대해 공동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검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일본 국내에서는 오키나와의 반환을 둘러싸고 미군기지에 있는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에 대해 사토는 비핵반환이 될지, 핵을 남겨둔 상황에서의 반환이 될지는 ‘백지상태’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나 존슨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인 1967년 12월 11일 중의원 예산위에서 사회당의 나리타 도모미(成田知巳)가 제기한 질의에 대해 사토는 “우리는 핵에 대한 세 가지 원칙, 즉 핵을 만들지 않고, 핵을 보유하지 않으며, 핵을 들여오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말해 두는 바이다.”라는 이른바 ‘비핵3원칙’을 답변으로 내놓았다.⁴⁴⁾ 또한 1969년 11월 19일,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사토·닉슨 회담을 통해서 21일 “비핵, 본토 수준으로 1972년에 오키나와의 시정권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주일미군이 한국 및 대만의 안전을 위해 작전행동을 할 경우 일본은 오키나와로 핵을 유입하는 문제 등을 포함한 미국의 사전협의 제의에 즉각 호응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문장이 기재되었다.⁴⁵⁾ 그러나 사전협의제도가 이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핵무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핵에 대한 사전협의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즉 미국은 오키나와를 반환하는 대신, 긴급 시 오키나와에 핵 반입을 포함한 기지 사용의 자유를 확보한 셈이다.

한편 1960년대 미국은 세계무대에서 영향력이 감소되기 시작했으며 일본과도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있었다. 두 차례의 섬유마찰 중 제1차는 이케다 내각 시기에 발생했고 제2차는 1960년대 말 70년대 초 사토 내각 시기에 발생했다. 제1차 섬유마찰은 미일 양국의 협조로 어느 정도 순조롭게 해결되었으나, 제2차 섬유마찰은 미국 국내정치와

43) 이시카와 마스미(2006) 『일본 전후 정치사』 (박정진 역), 후마니타스, p.149

44) 위의 책, pp.150-151

45) ‘긴급 시 핵무기 재반입’을 포함한 오키나와 기지 자유 사용 문제는 1969년 11월 사토·닉슨 회담에서 가장 치열히 논쟁을 벌였던 사안이다. 공동 성명 제8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총리대신은 핵무기에 대한 일본 국민의 특수한 감정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일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대통령은 깊은 이해를 표시하고 미일안보조약의 사전협의제도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손상됨이 없이, 또 오키나와 반환을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정책에 배치되지 않도록 실시한다는 취지를 총리대신에게 확인했다.

오키나와 반환문제가 연계되어 양국의 심각한 대립을 초래하고 있었다. 1960년대 큰 폭으로 증가한 일본의 대미섬유수출에 대하여 닉슨 대통령은 주요 관계 국가들과 협력하여 자발적으로 대미수출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섬유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에 일본은 강하게 반대했으며 자민당 섬유대책특별위원회, 중의원 상공위원회, 참의원 상공위원회 등은 미국의 섬유제품수입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미국에 공식적으로 항의표시를 했다. 뿐만 아니라 GATT에서 섬유제품에 대해 협의하자는 미국의 요구도 거절했다.

이는 일본이 미국의 정책에 공식적으로 반대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1968년 일본 GNP가 1,419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미국과 구소련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는 데 있다. 일본은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외교적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당시 일본 내에서 오키나와 반환문제를 둘러싸고 민족주의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문제의 해결은 1969년 11월 대미섬유수출을 자율적으로 규제해야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일본이 받아들이고, 미국은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기로 하면서 매듭지어졌다. 이는 적어도 경제문제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의 대등한 관계설정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고도성장기 대미협조외교는 일본의 경제발전을 등에 업고 미국과의 종속외교에서 탈피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자주적 입장을 취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사토가 오키나와 반환을 위해 미국에게 지불해야만 했던 정책상의 대가는 첫째, ‘한국·대만 조항’이다. 이는 미국이 오키나와 반환 이후 아시아의 안전보장에 대해 일본 측에 일정의 책임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이나 대만의 안정보장에 관여할 용의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조항에 대해 일본 내에서의 반발은 컸으나 사토는 오키나와 반환을 위해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둘째, 핵 반입 밀약이다. 내용은 미국 유사시 일본에 핵 반입을 일본 정부가 동의한다는 것이다. 이 밀약의 전모에 대한 일본 측의 증언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미국 측 당사자의 회고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로 알려져 있다.⁴⁶⁾ 셋째, 섬유교섭이다. 미국과의 섬유마찰에서 사토는 일본의 대미수출에 대한 자유규제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며, 이 또한 오키나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가였다.⁴⁷⁾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시다 노선은 한편으로는 대미협조외교에서 크게 이탈하거나 하는 외교정책을 펼치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오키나와 반환과 비핵3

46) 이시카와 마사미(2006), p.158

47) 田中明彦(1997) 『安全保障』 讀賣新聞社, pp.221-230

원칙, 미일안보관계 틀 재확인과 같은 대미일변도의 의존성에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통해 ‘협조’외교와 ‘자주’외교의 이중적 아이덴티티를 표출하고 있었다. 특히 오키나와 반환은 사토가 미국에 대한 많은 양보를 통해 이룬 것이기는 했으나, 미국과의 외교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자주’외교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섬유문제라는 제한적 범위가긴 하지만 사토 내각 시기에 발생한 섬유마찰은, 미일관계가 경제영역에서 평등한 경쟁자 관계로 발전한 최초의 사례이다.

5. 결론

1945년 패전과 함께 새로운 세계의 헤게모니 국가로서의 지위는 미국이 차지한 반면, 일본은 미국의 간접통치로 인해 미국에 협조하고 그 틀 안에서 발전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전후 역사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했던 정치인은 요시다 시게루였으며 그 정신은 요시다 노선으로 이어져왔다. 또한 요시다 노선이 일본 정치에 강력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만큼, 일본의 외교 노선도 대미의존성을 용인하고 대미협조외교를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누구보다 일본 재군비를 반대해 왔던 요시다가 신속하게 경찰예비대를 조직하고 유엔군에게 전면적으로 협조하면서, 강화조약체결을 위한 탈레스와의 회담에서 일본의 육·해군을 포함한 새로운 5만의 보안대 창설을 주장하는 등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외양을 보였던 것은, 일본이 조기강화조약 체결을 통해 독립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당시 일본의 최대과제로 여겼기 때문이다. 요시다는 형식상이라도 미국으로부터의 ‘자주성’ 내지는 ‘평등한 협력자’가 되는 것을 외교의 기본목표로 삼았으며, 이러한 ‘협조’외교와 ‘자주’외교의 이중적 아이덴티티는 요시다 노선을 이어받은 전후 일본의 내각에서도 잘 드러난다.

1960년 6월 22일 이케다는 미일 양국이 동반자관계에 기초하여 각료급의 미일경제무역위원회를 설치에 동의한다는 ‘케네디·이케다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일본의 지위를 격상시켜 미국과 대등한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이케다의 뒤를 이은 사토 내각은 요시다 노선을 계승하여 대미협조외교와 미일안보조약의 틀에서의 경제발전을 중시했으나, 외교적으로는 전후 상실한 오키나와를 회복하는 것을 최고의 현안과제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오키나와 반환은 ‘한국·대만 조항’과 핵 반입 밀약, 섬유교섭 등

사토가 미국에 대한 많은 양보를 통해 이룬 것이었지만, 미국과의 외교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는 자주외교의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요시다 노선은 대미협조외교에서 크게 이탈하거나 하는 외교정책을 펼치지 않으면서도 선택적으로 자주적 입장을 취하는 양상을 보여 왔으며, 이러한 대미 ‘협조’외교와 ‘자주’외교의 이중적 아이덴티티는 그 길항관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일본 외교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동일행위의 표리를 이루어 왔다.

【參考文獻】

한국어 문헌

- 김남은(2017) 「강화와 안보를 둘러싼 미일교섭과 일본의 전략: 요시다 시게루를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56, pp.359-360, pp.363-366
- 남기정(2013) 「요시다 시게루의 전후 구상과 리더십: “군대없는 메이저국가”구상과 “기치국가”의 현실」 『일본 부활의 리더십: 전후 일본의 위기와 재건축』 동아시아연구원, pp.29-32
- 더글라스 맥아더(1993) 『맥아더 회고록』 (반광식 역, 一信書籍出版社, pp.33
- 마고사키 우케루(2013)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양기호 역, 메디치미디어, p.32: p.63 p.70, pp.43-45
- 이시카와 마사미(2006) 『일본 전후 정치사』 (박정진 역, 후마니타스, p.149, pp.150-151, p.158
- 이원덕(2005) 「일본의 동아시아지역 형성정책의 전개와 특징」 『일본연구논총』 22, p.66
- 이오키베 마코토(2002) 『일본 외교 어제와 오늘』 (조양욱 역, 다락원, pp.45-46
- 존 다우어(2009) 『패배를 꺼안고』 (최은석 역, 민음사, p.524
- 현진덕(2013) 「요시다 노선과 하토야마 노선: 전후 일본외교정책의 2개의 이념형」 『일본문화연구』 45, p.615

일본어 문헌

- 大嶽秀夫(1991) 『戦後日本防衛問題資料集: 非軍事化から再軍備へ』 1, 三一書房, p.427, pp.443-444
- _____ (1992) 『戦後日本防衛問題資料集: 講和と再軍備の本格化』 2, 三一書房, 1992, p.449
- _____ (2005) 『再軍備とナショナリズム』 講談社, pp.81-82, pp.93-95
- 大野勝巳(1978) 『霞が關外交: その伝統と人々』 日本經濟新聞社, pp.33
- 片岡鐵哉(1992) 『さらば吉田茂: 虚構なき戦後政治史』 文藝春秋, p.33
- 鍋木清一(1972) 『日本政治家100選』 秋田書店, p.170
- 外務省(編)(2002a) 『日本外交文書: 平和条約の締結に関する調書』 III, 外務省, pp.560-561, p.573
- _____ (2002b) 『日本外交文書: 平和条約の締結に関する調書』 IV, 外務省, pp.53-54
- 高坂正堯(1963) 「現實主義者の平和論」 『中央公論』 78(1), pp.38-49
- _____ (1964) 「宰相吉田茂論」 『中央公論』 79(2), pp.76-111
- _____ (1968) 『宰相吉田茂』 中央公論新社, p.33
- 重光葵(1988) 『(續) 重光葵手記』 中央公論社, pp.252-253, pp.266-267, p.270, p.359
- 田中明彦(1997) 『安全保障』 讀賣新聞社, pp.221-230

- 渡辺昭夫(1999)「戦後日本の形成者としての吉田茂」北岡伸一, 五百旗頭眞(編)『占領と講和: 戦後日本の出発』情報文化研究所, pp.166-178
- 渡部昇一・工藤美代子(2010)「今こそ「吉田茂」待望論」『Will』6, pp.62-73
- 吉田茂(1958)『回想十年』2, 新潮社, pp.142-143; pp.160-161
- _____(1993)『回想十年』1, 中央公論社, pp.22-35

논문 투고 일자 : 2018. 10. 14.

논문 심사 일자 : 2018. 11. 08.

게재 확정 일자 : 2018. 11. 09

< 要 旨 >

アメリカの対日圧力と吉田路線の対米協調外交の再考察

金男恩

戦後日本の外交における最も重要な課題は、アメリカの圧力に対する日本の選択が「協調」なのか、それとも「自主」なのかという問題である。この二つの傾向性がいつも整合的に現れるわけではないが、日本外交の主体を担ったのは「協調」路線であり、その精神は吉田路線として継承されてきた。しかしながら、吉田路線がアメリカの「協調」を何よりも重要視したとして、アメリカとの不平等な関係から脱皮しようとする認識すら欠如していたわけではない。つまり、彼らはアメリカとの「協調」の枠の中で、それが「形式上の自主」であっても「自主」を獲得しようと努力をしていたのである。たとえ、吉田茂は講和条約の早期実現のため、そして池田勇人はアメリカとの関係を対等なパートナーとして発展させるため、佐藤榮作は沖縄の返還を実現させるため、日米協調路線を前面化していた。このように、戦後日本の外交において「協調」と「自主」は相互補完的で同一行為の表裏関係を成していると言える。

Reconsideration of the US's Pressure on Japan and the Yoshida Line's
Cooperative Diplomacy with the US

Kim, Nam-Eun

The most important issue in Japan's postwar diplomacy is whether Japan chooses to be "cooperative" or "autonomous" American pressure. Although these two tendencies do not always appear consistently, the "cooperation" route characterized Japanese diplomacy, and its spirit has been passed down as the Yoshida Line. However, Yoshida Line attaches importance to America's "cooperation" more than to anything else, trying to escape from an unequal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In other words, the policy sought "independence" even though it was "formally autonomous" in the framework of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For Yoshida Shigeru to realize the peace treaty promptly, and Hayato Ikeda to develop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s an equal partner, Eisaku Sato developed the Japan-US cooperative route to realize the return of Okinawa. In this way, it can be said that "cooperation" and "autonomy" are complementary and form a front-back relationship of the same act in Japan's postwar diplomacy.